

##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방공간 부산\*

최민경\*\*

### 【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귀환의 '창구', 부산 그리고 디아스포라 |
| II. 선행연구 검토                 | 제1장. 주택 및 실업문제             |
| III. 부산을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상황 | 제2장. 전염병문제                 |
| 제1장. 비공식적 귀환 시기             | V. 나오며                     |
| 제2장. 공식적 귀환 시기              |                            |

### I. 들어가며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제국일본의 세력권이었던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시점에서 제국일본 세력권의 인구는 1억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중 약 9%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대한 사람의 이동(환류(還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갔다.”<sup>1)</sup> 그 중에서도 한인(韓人)의 이동이 두드러져 한반도 이외 지역에 있었던 한인 약 500만 명 중 대부분은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sup>2)</sup>의 귀환(repatriation)은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일본, 중국대륙, 대만, 남태평양 등 지역으로부터 급속하게 이뤄졌고 총 300만 명이 이동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일제 식민지통치의 강제와 모순에서 비롯된 해외이주 및 강제연행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한인이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였다.<sup>3)</sup> 따라서 제국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1) 蘭信三(2019), 『引揚・追放・残留の国際比較・関係史にむけて』,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編, 『引揚・追放・残留—戦後国際民族移動の比較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p.2.

2) 유대인 이산의 역사에 기원을 가진 개념으로 글로벌화 속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근래 이루어진 관련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근대 이후 한인이 동북아 각 지역, 사할린 등으로 ‘흩어지는’ 이주 현상에 대해서는 ‘이산’, 흩어진 집단에 대해서는 ‘디아스포라’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 장석홍(2003),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학회, p.11.

본에 의해 ‘이산’했던 민족이 한반도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이동의 흐름이었으며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이처럼 추상적이고 원대한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으며 동시에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특히, 귀환선(歸還船)이 도착하는 지역, 바꾸어 말하자면, 귀환의 ‘창구’가 된 지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일차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유입을 의미했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귀환에 대한 시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해방공간 부산에 주목한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내내 많은 한인들이 ‘떠나간’ 곳이었다. 특히 일본으로의 한인 이주는 거의 대부분이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해방 후 이들이 귀환한 곳도 부산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약 3년 간 부산을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이들의 귀환이 부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이라는 시각에서 귀환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II. 선행연구 검토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1990년대 이전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이민사나 재일한인사의 일부로 귀환문제가 언급되는 정도였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귀환 자체를 독립적인 주제로 설정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관련 연구는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중 최영호의 연구는 가장 초기의 연구이다.<sup>5)</sup> 이 연구는 해방과 더불어 우후죽순 등장한 재일한인 민족단체 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이들의 귀환과정을 분석하였다. 이후에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재일한인의 귀환을 고찰하는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심도 있는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단계에 이른 상태는 아니었다.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연구의 전환점으로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로 ‘해방후 해외한인의 귀환문제 연구’가 선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과제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대륙, 대만, 사할린, 남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귀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료분석을 통한 귀환실태 검토와 귀환생존자의 구술자료 수집,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연구과제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 전반에 관한 1차적인 사료 축적과 집중력 있는 연구성과의 도출이 이뤄졌다. ‘해방후 해외한인의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 중에서는 재일한인의 귀환에 관한 것이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제동원 생존자의 구술자료 수집에 기반을 둔 연구<sup>6)</sup>와 연합국최고

4) 장석홍, 위의 글, p.16.

5) 최영호(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 활동』, 글모인, pp.1-365.

6) 정혜경(2003), 『일제 말기 조선인 군노무자의 실태 및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사령부(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SCAP) 및 일본정부의 귀환정책과 민족단체의 대응에 관한 연구<sup>7)</sup>가 있다.

이렇게 본격화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연구는 이후 미군정기 사료의 선별과 재조(在朝) 일본인 인양(引揚)<sup>8)</sup> 문제와의 연관성 검토, 그리고 귀환에 대한 모국 인식 등 주제와 방법에 있어서 확대되어 왔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귀환에 대한 모국 인식에 관한 연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구호운동을 고찰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리고 이들 연구를 통해서도 당시 이산했던 한인의 귀환이 “민족적 과제”로서 자리매김하였고<sup>10)</sup> 해방과 함께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인구의 이동의 흐름으로 인식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는 존재를 통해 모국은 영토와 구성원의 관계성을 재구성하며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1)</sup>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민족적 과제로 삼았던 해방된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인식은 얼핏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 디아스포라의 귀환이 지녔던 의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결코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모국에게 실제 디아스포라와의 ‘만남’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디아스포라 정치(diaspora politics), 바꾸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에 대한 포섭과 배제가 가장 첨예해 지는 국면으로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에 주목하는 것은 귀환 나아가 귀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시각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sup>12)</sup>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연구가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녔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3-92; 여성우(2004), 『1940년대 전남지역 한인의 강제연행과 귀환: 구술을 통해 본 귀환생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22, 호남사학회, pp.1-34.

7) 채영국(2003),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pp.83-103; 김인덕(2003), 『해방 후 조련과 재일조선인의 귀환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2-54; 조용욱(2005),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직전 미국 측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33, 한국근현대사학회, pp.247-282.

8) ‘인양’은 ‘repatriation’의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일본제국의 세력권 내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돌아오는 흐름, 과정을 말한다.

9) 황병주(2000), 『미군정기 전재민 구호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35, 한국역사연구회, pp.76-113; 이현주(2004),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戰災同胞 구호활동: <대중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현대사학회, pp.35-59; 황선익(2018), 『해방 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5, 한국근현대사학회, pp.117-149.

10) 1945년 8월 31에는 이미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朝鮮在外戰災同胞救濟會)가 창립하였고 이후 조선 인민원호회(朝鮮人民援護會), 전재동포원호동맹(戰災同胞援護同盟) 등 많은 단체들이 귀환하는 ‘동포’를 구호하기 위한 활동에 뛰어 들었다는 사실도 귀환이 “민족적 과제”였음을 말해준다. 황선익, 위의 글, p.131.

11) Levitt, Peggy. and Rafael de la Dehesa (2003),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Redefinition of the State: Variations and Explanations”, *Rthnic and Racial Studies* 26(4), Routledge, pp.587-611; Skrentny John D. et al.(2007), “Defining Nation in Asia and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of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4), Sage Publications, pp.793-825.

이와 더불어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추상적 차원의 담론 중심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3)</sup>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특히 귀환선이 도착하는 지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귀환선이 도착하는 지역, 즉, 귀환의 ‘창구’가 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국가, 민족의 과제이기 이전에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이는 귀환에 대한 시선에도 반영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해방 직후부터 이산했던 한인의 귀환이 단기간에 대규모 이루어진 곳으로 이들의 귀환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미친 영향은 인천 등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컸다. 물론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연구에도 부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한다.<sup>14)</sup>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해방공간 부산에 있어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지역사회로의 대규모 인구유입과 동시에 그러한 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대응을 의미하였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 즉, 귀환에서 파생된 사회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귀환에 대한 인식이 지니는 지역적 다양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디아스포라연구의 구체성과 실천성 제고를 시도하도록 하겠다.

### Ⅲ. 부산을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상황

#### 제1장. 비공식적 귀환 시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연합국최고사령부,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sup>15)</sup> 미국은 이미 1940년대 초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정책을 구상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문제를 자리매김하였으며<sup>16)</sup> 따라서 그것은 제국일본 세력권 내의 다른 민족집단의 귀환문제와 연동된 형태로 논의되었다. 물론 그 중 주요한 정책 대상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한인과 일본인의 귀환이었다. 그러나 연합국최고사령부 그리고 미국에게 동아시아지역에서 귀환정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귀환에 있었

12) 예외적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귀환 한인의 구호활동과 이들에 대한 모국의 인식을 살펴본 이현주의 연구가 있으나, 인천이라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현주, 위의 글, pp.35-59.

13) 이상봉(2010),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研究: 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覺』, 『한일민족문제연구』 18, 한일민족문제학회, pp.107-146.

14) 최영호(2003),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5-49; 최영호(2011), 『韓人 歸還者의 눈에 비친 解放直後 釜山의 이미지』, 『韓日民族問題研究』20, 한일민족문제학회, pp.101-127.

15) 1945년 8월 15일 시점에서 이산 상태의 한인 디아스포라 약 500만 명 중 약 80%가 일본과 중국대륙(만주 포함)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연합국총사령부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정책 또한 중국(대륙)과 일본을 주요 대상으로 했는데 일본정부에게는 귀환정책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는 지속적인 교섭을 거쳐 추진하였다.

16) 황선익(2013), 『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재일한인 귀환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64, 한국근현대사학회, p.153.

다.<sup>17)</sup> 이는 ‘적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환이 안정적인 대일(對日)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게다가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 점령하게 된 것도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원인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해방 직후에는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배경, 형태이기는 하지만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비대칭적인 관계 구조 아래에서 이산했던 한인들이 모국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했고, 그러한 귀환의 열의는 공식적인 귀환정책의 시작을 기다릴 수 없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재일한인의 귀환은 해방 직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에 어느 정도의 재일한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연구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략 200만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모국의 해방 소식을 들은 이들 재일한인 대다수는 귀환을 하고자 했지만 공식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정책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정부는 독자적으로 강제동원에 의해 도일(渡日)한 재일한인부터 귀환을 진행하였다. 1945년 9월 1일 지방장관에게 내린 통달(通達)에서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사업 자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광업 분야 노무자의 경우, 일본 체류를 희망하면 허가하여 귀환 순위를 뒤로 하고 토목·건설 분야 노무자부터 귀환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강제동원 시작 전에 일본에 건너온 재일한인에 대해서는 “귀환 가능한 시기가 되면 상세한 지시가 내려올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현재 거주지에서 평정하게 업무에 종사하며 대기하도록” 하였다.<sup>18)</sup> 이는 재일한인의 귀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일본사회에 큰 동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일한인 입장에서 보면 해방된 모국으로의 귀환은 ‘대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빨리 돌아가고자 하였다.

특히 1945년 9월 중순이 되면 부산과 하카타(博多), 부산과 센자키(仙崎)를 잇는 항로에 연락선(連絡船)이 운항되기 시작하면서<sup>19)</sup> 재일한인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많은 재일한인들이 귀환의 기회를 잡아보고자 몰려들어 하카타항과 센자키항 근처에서 귀환을 기다리며 노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락선은 강제동원 한인 노무자의 수송에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재일한인은 탈 수 없었다. 이에 하카타항과 센자키항에 도착한 재일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밀항’이었다. 이는 개인적으로 어선 등을 빌려 대한해협을 건너는 방법이었는데 빌리는 데도 많은 돈이 들었을 뿐 아니라 건너는 과정 또한 어뢰, 풍랑 등의 영향으로 위험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재일한인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부산은 해방 직후부터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한 귀환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락선을 타고 온 강제동원 노무자와 일부 군인·군무원을 물론 다양한

17) 황선익, 위의 글, p.165.

18) 厚生省勤勞局長・厚生省健民局長・内務省管理局長(1945), 『朝鮮人集團移入勞務者等ノ緊急措置ニ関スル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 『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pp.2-8.

19) 鐵道總局業務局長(1945), 『関釜並ニ博釜航路經由旅客輸送ノ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 『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pp.12-14.

경로와 수단을 이용하여 대한해협을 건너 온 ‘일반’ 재일한인이 부산항을 통해 귀환을 달성한 것이다. 다만 1945년 10월까지의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한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주한 미군정의 경우 외사과(外事課)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정해졌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다.<sup>20)</sup> 따라서 해방 초기 부산을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양상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내부 보고를 통해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인데 1945년 9월 25일 경에는 이미 부산지역에 약 1만 명의 한인 귀환자가 있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서는 3만 7천여 명이 추가로 귀환하였다고 한다.<sup>21)</sup>

## 제2장. 공식적 귀환 시기

1945년 11월 1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비(非) 일본인의 일본으로부터의 귀환(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이라는 지령을 일본정부에게 내렸다. 이 지령은 비록 재일한인의 귀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과 관련하여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 내린 최초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령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22)</sup> 실제 이 지령이 내려진 이후 중국대륙, 대만의 한인 귀환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 협의도 시작되었으며 과거 제국일본의 세력권이었던 지역 전체를 둘러싼 다방향의 귀환이 본격화한다. 그리고 부산은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창구’로서의 특징이 보다 강해졌다. 1946년 1월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전체 중 70~80%가 부산항을 통해 모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sup>23)</sup> 1946년 들어 중국대륙, 대만 등 일본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상하이(上海) 등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 출발한 귀환선은 부산으로 입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 전체를 두고 봐도 그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산을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양상을 주요 출발지 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일한인의 귀환은 앞에서 언급한 1945년 11월 1일의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령을 계기로 이전 시기보다 체계적으로 통제되면서 이루어졌다. 재일한인의 귀환에는 계속해서 센자키항, 하카타항이 주로 이용되었고 일본정부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노무자부터 귀환시키던 방식을 답습하되 탄광 노동자 또한 신속히 귀환토록 했다. 또한 일본 국내지역을 세 개로 나누어 규슈(九州)북부지역, 간사이(關西)지역, 기타 지역 순으로 한인 귀환을 진행하였다. 일본정부도 재일한인의 질서 있는 귀환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귀환이 이뤄지는 항구까지의 대규모 수송을 위한 철도 등 교통

20) 주한 미군정이 실질적으로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지원 업무에 나선 것은 외사과에서 부산항 제1부두 근처 창고를 임시수용센터로 사용하는 안을 제출한 이후인데, 이 안이 제출된 것이 1945년 9월 말에서 10월 정도로 추측된다(鈴木久美(2017), 『在日朝鮮人の「帰国」政策—1945~1946年』, 緑陰書房, p.156.)

21) 최영호, 앞의 책, p.94.

22) 鈴木久美, 前掲書, p.49.

23) 『百万名 突破 記念式: 釜山埠頭 帰還同胞収容所서 盛大』, 『中央新聞』, 1946년1월14일.

편 마련부터 시작하여 1945년 11월 말에는 지방인양원호국(地方引揚援護局)<sup>24)</sup>을 설치함으로써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임시 수용, 지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군인·군무원과 강제징용 노무자의 귀환은 1945년 12월말까지 거의 끝났으며 1946년부터는 ‘일반’ 재일한인의 귀환국면으로 넘어간다.<sup>25)</sup> 다만 1946년 들어서 재일한인의 귀환은 미미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2월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에 남아있던 한인, 중국인, 대만인 등을 대상으로 귀환 희망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이 등록을 통해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46년 3월 현재 재일한인의 수는 약 64만 명으로 해방 직후 일본에 남아있던 한인 중 70% 가까이는 이미 귀환한 상태였다. 이후 1947년 5월 2일 일본정부가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하면서 재일한인의 인구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98,507명이었으므로 1946년 3월 이후 추가로 귀환한 재일한인은 4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반’ 재일한인의 귀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연합국최고사령부와 일본정부의 귀환 체계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귀환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대륙, 대만으로부터의 한인 귀환은 1946년이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시점에서 중국대륙에는 약 250만 명, 대만에는 약 5천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재중한인의 귀환문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귀환에 비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재중한인의 귀환을 진행하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공산당, 소련과의 관계가 얽혀 결코 원활할 수 없었다.<sup>26)</sup> 재중한인의 귀환도 일본군 소속이었던 한인 병사와 ‘일반’ 한인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는데 전자의 경우 국민정부가 설치한 한적관병관리소(韓籍官兵管理所)에 수용되어 한국광복군의 통제를 받다가 귀환하였고, 후자의 경우 임시정부가 조직한 한교선무단(韓僑宣撫團)이 담당하였다.

정치외교적 배경으로 인해 연합국최고사령부와 국민정부 주도의 귀환 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중국 동북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재중한인의 대부분은 텐진(天津)의 탕구(塘沽)항과 상하이항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 중 상하이항을 출발한 귀환선의 경우 거의 모두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하며 1946년 3월 4일 약 5천 명을 시작으로 미국 수송선, 상륙선 등을 이용한 귀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상하이로부터 귀환한 재중한인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략 3만여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sup>27)</sup>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1946년 안에 귀환을 하였기 때문에 부산으로의 유입도 이 시기 집중되었다. 그밖에 부산을 통해 귀

24) 지방인양원호국은 후생성(厚生省) 사회국(社会局)에서 통괄하였다. 시모노세키(下関), 하카타 등 7개 지역에 만들어졌으며 센자키, 모지(門司), 요코하마(横浜)에는 출장소가 있었다.

25) 최영호(1995),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제 구조』, 『한일관계사연구』4, 한일관계사학회, p.116.

26) 황선익(2013), 『동북아정세와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1944~19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4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286~287.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들을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여 이들 중 일부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귀환하였고 나머지는 잔류하였다. 귀환자 중 해로를 통한 귀환은 매우 소수였고 육로를 통한 귀환이 다수였는데 육로 이동의 특징 상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27) 장석홍(2004), 『해방 직후 상해지역의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28, 한국근현대사학회, p.282.

환한 재증한인은 항로 관계 상 광저우(廣州) 등 중국 남부지역으로부터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대만으로부터의 귀환 또한 일본군 소속이었던 한인 병사와 일반 한인으로 구분되어 중국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는데 중국대륙과 비교했을 때 임시정부의 영향력은 약했고 대만경비총사령부(台灣警備總司令部)와 미국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활한 양상을 보였다.<sup>28)</sup> 1946년 3월 군인·군무원부터 시작하여 4월에는 일반 한인들까지 신속하게 귀환을 시작하였으며 지룽(基隆)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경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대만으로부터의 귀환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만 한인들이 이용한 귀환선은 싱가포르 등지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먼저 태우고 대만에 기항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사실로 동북아지역 이외로 이산한 한인들의 귀환에 있어서 결절점의 기능을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귀환의 결과 1947년 2월 현재 대만에 잔류한 한인은 약 360명 정도였으며<sup>29)</sup> 이를 통해 1946년까지 대부분의 한인이 부산을 통해 귀환하였고 그 규모는 4천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IV. 귀환의 ‘창구’, 부산 그리고 디아스포라

1945년 12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설 『戰災同胞를 救恤하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는 方今建國途上에 있다. 政治分野에 對立的抗爭이 熾熱한 가운데서도 同族의 紐帶인 血緣의 情緒에는 잊질수없는 일이다. (중략) 三千萬겨레 그누구한사람이 建國의 役軍아닌이가 업을 것이니 戰災同胞에 對한 一□의 同情은 다만 同族의 情愛로서만이 아니라 實로 國의 任務의 하나라는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sup>30)</sup>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재동포’를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해방 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국가적, 민족적 과제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당위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인 디아스포라의 원활한 귀환을 위하여 개별적인 여행은 삼가라는 교통국의 지적<sup>31)</sup>이나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모금을 위한 각종 스포츠, 문화행사<sup>32)</sup> 등은 당시의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한반도 전체에서 동질적으로 공유된 것은 아니었다. 앞

28) 황선익(2005), 『해방 후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34, 한국근현대사학회, pp.204~215.

29) 황선익, 위의 글, p.217.

30) 『戰災同胞를 救恤하자』, 『東亞日報』, 1945년12월13일.

31) 『同胞들 故國歸還爲해 不急旅行은 自肅하자』, 『民衆日報』, 1945년10월12일.

32) 『運動界消息, 歸還同胞救濟拳鬪盛況』, 『民衆日報』, 1945년11월21일; 『救援하자 歸還同胞, 音樂과 演劇의 밤』, 『嶺南日報』, 1945년11월30일.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최대의 귀환 '창구'였던 부산에는 해방 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당시 인구 약 40만 명의 5배에 가까운 한인 디아스포라가 귀환하였다. 즉 부산의 경우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일차적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을 의미했고 그 결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항을 통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는 많은 경우 고향으로 다시 떠났지만 혼란 속에서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에 잔류하는 사람도 적잖게 생겨났다. 이 장에서는 『釜山新聞』을 비롯하여 부산발 『조선통신』의 기사 등 부산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보도를 참고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관련된 부산의 특징적인 경험을 주택 및 실업문제와 전염병문제라는 귀환에서 파생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방공간 부산에서 귀환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었는지 검토하겠다.

## 제1장. 주택 및 실업문제

일본, 중국대륙, 대만 등 해방 이전 한인 디아스포라가 주로 체류했던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귀환이 마무리 된 1947년 말 현재, 부산을 통해 들어온 귀환자의 수는 약 250만 명에 달했다.<sup>33)</sup>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일어나면서 부산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기본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한 귀환선은 제1부두에서 귀환자를 하선시켰으며 하선한 이들은 미군정 및 구호단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귀환 신고를 한 후 검역 및 DDT 살포와 같은 소독 그리고 환전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이후 원하는 목적지 별로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귀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철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부산항 근처에는 이들을 위한 임시수용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귀환의 '창구'로서 이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결과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어졌다.

물론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부산을 떠났다. 이들은 부산에서 다시 기차 등을 이용하여 고향이나 기타 연고지로 향했는데 1945년 12월 미군정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항을 통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최종 귀환지 중 한반도 남부(대전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경상남북도와 부산지역으로의 귀환이 두드러져 62.5%에 이른다.<sup>34)</sup> 1945년 12월이라는 시점은 재일한인의 귀환이 중심이었고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은 아직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1946년 이후 중국대륙, 대만 등지로부터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는 최종 귀환지의 분포에도 일정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1946년, 1947년에 걸쳐서도 최종 귀환지는 한반도 동남권이 중심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한반도 동남권에 집중된 한인 디아스포라의 최종 귀환지 중에서도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드러졌다. 1947년 말 시점에서 부산을 통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33) 『釜山府内の要救護者15万』, 『民主衆報』, 1947년12월24일.

34) 최영호(2003), 앞의 글, p.14.

8.8%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그대로 부산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5)</sup> 부산 잔류의 이유는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고향의 인적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였다고 보이며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귀환자의 잔류를 통해 부산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해방 직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빠져나갔다고는 하나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이 워낙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다보니 결과적으로 부산의 인구는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인구 증가의 결과 가장 먼저 부상한 사회문제는 주택문제였다. 부산은 이미 1940년대 초반부터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진 귀환자의 존재는 이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는 당시 신문에 종종 보도되었는데 임시수용소에 계속해서 체류하거나 방공호 등에 기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sup>36)</sup>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전 일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가옥을 분배하기도 하였지만<sup>37)</sup> 역부족이었으며 귀환자의 대규모 유입은 한국전쟁 피난민의 정착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부산의 도시문제, 바꾸어 말하자면, 도시 중심 그리고 항만 주변 고지대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빈민 거주 지역(판자촌)의 존재의 원인이 되었다.<sup>38)</sup>

한편, 주택문제와 더불어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실업문제라는 혼란을 야기하였다.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1946년 5월 「실업자 도시 부산: 12만 무직자 중 귀환 동포 반 이상」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산 시내의 실업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에 달하며 그 중 60% 이상이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였다.<sup>39)</sup> 이후에도 실업자 증가는 이어져 1946년 7월 한 달 사이에만 2천 여 명이 늘어났다.<sup>40)</sup> 실업자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추가적으로 파생시키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노점상 양산, 아동 행상 발생, 절도 빈발 등을 들 수 있다.<sup>41)</sup>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귀환자 중 상당수가 부산에 잔류하면서 실업문제는 1947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sup>42)</sup> 물론 부산에는 부두하역처럼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용노동 형태의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있었으나 이러한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고 실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sup>43)</sup>

35) 『釜山府内の要救護者15万』, 『民主衆報』, 1947년12월24일.

36) 『哀愁어린港都의古今: 歸還同胞密輸等으로混淆한釜山』, 『漢城日報』, 1946년7월9일.

37) 『戰災農民二万余: 前日人土地를耕作』, 『釜山新聞』, 1946년6월27일; 『極貧歸還同胞, 濟州島에約百戶移住』, 『釜山新聞』, 1947년11월15일.

38) 배미애(2007), 『부산시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13(5), 한국지역지리학회, p.487; 공운경(2010), 『부산 산동네의 도시경관과 장소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13(2), 한국도시지리학회, p.133.

39) 『失業者都市釜山: 十二万無職者中歸還同胞半以上』, 『釜山新聞』, 1946년5월30일.

40) 『府民四分之一失業者』, 『釜山新聞』, 1946년8월14일.

41) 『哀愁어린港都의古今①歸還同胞密輸等으로混淆한釜山』, 『漢城日報』, 1946년7월9일.

42) 『港都의求職者增加一路: 釜山職業紹介所에서 본 社會相』, 『釜山新聞』, 1947년7월3일.

43) 일용직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시점의 실업률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업문제를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겠다. 당시 부산항의 물류량 등을 고려했을 때 항만 하역, 운송

그리고 이와 같은 주택 및 실업문제는 귀환에 대한 양가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귀환자의 대규모 유입은 주택 및 실업문제가 식량 부족, 치안 불안 등을 낳아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들은 ‘전재동포(戰災同胞)’, ‘전재민(戰災民)’으로 ‘폼여야만 하는’ 구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병존하였다. 실제 부산 지역사회의 현실을 초조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까지의 여비가 없어서 부산에 머무르는 귀환자를 위하여 소규모 모금<sup>44)</sup>을 진행하거나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도 하였다.<sup>45)</sup>

## 제2장. 전염병문제

앞 절에서 살펴본 주택 및 실업문제가 해방공간 부산에서 귀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정 정도 형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귀환 디아스포라에 대한 동정이 뒤섞인 양가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1946년 여름 이후가 되면 이러한 양가적인 인식 속에서도 불신과 공포가 커지는데 그 원인은 바로 전염병, 구체적으로는 콜레라의 확산 때문이었다.<sup>46)</sup>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에는 인구이동이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해방공간 부산의 극단적으로 높았던 이동성을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1946년 5월 부산에는 콜레라에 관한 소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4월말 3천 여 명의 재중환인을 싣고 광둥에서 출발하여 5월 1일 부산에 입항한 미군의 리버티급 수송선에서 콜레라 환자가 1명 발생한 것인데 이 환자는 5월 2일 사망하였으며 기타 탑승자는 검역, 격리로 인해 일주일 넘게 상륙을 하지 못하고 해상에 머물렀다. 결국 이 수송선에서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시작된 보건 위생 제도의 마비와 미군정의 안일한 대응 아래에서 콜레라는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콜레라 확산 초기 단계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광둥에서 귀환선이 입항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는 265명(해상 포함)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10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40%를 넘었다.<sup>47)</sup>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46년은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로 부산항으로는 귀환선이 끊임없이 입항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은 귀환의 ‘창구’입과 동시에 전염병의 ‘창구’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5월 20일 대전에서 특정된 콜레라 환자는 상하이로부터 귀환한 자로 부산에 상륙 후 고향 전북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인천의 환자 또한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귀환 후 대전, 서울, 황해도(개성, 연안(延安))를 거쳐 이동한 후 콜레라임이 판명되었다.<sup>48)</sup> 부산에서의 콜레라 방역은 전국적인 확산 여부를

업이 실업자 감소에 일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부산이라는 지역 전반에 있어서 실업문제가 중요치 않았거나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4) 「歸郷路資를義捐: 釜山署員이歸還同胞에」, 『釜山新聞』, 1946년6월12일.

45) 「歸還同胞失業對策: 農家配置土木工事に動員」, 『釜山新聞』, 1946년5월19일.

46) 김만석(2011), 「콜레라, 난민 그리고 항구: 해방 이후 부산의 지정학적 풍경」, 『해양평론』2011, 한국항해항만학회, p.157.

47) 「虎疫全道에猖獗: 可恐! 死亡率五〇%」, 『釜山新聞』, 1946년6월12일.

좌우 하였고 따라서 당시 부산에서는 전면적인 시내교통 차단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하카타와의 항로 운항 중지, 기타 입항 선박의 인천 또는 군산으로의 회항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의 특성 상, 여름 동안 확산세는 더욱 커져 1946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 5천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 9 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콜레라가 부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콜레라의 확산은 귀환에 대한 시선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지난 일 아침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귀환선에서 호열자(虎列子)忠子が 발생하여 三十만 시민 아니 三百만 도민에 큰 공포를 느끼게하고 있는데<sup>49)</sup> [중략]

위의 인용을 통해 콜레라라는 공포의 대상이 부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바로 이 공포의 대상이 귀환선을 통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귀환선의 묘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귀환선 자체를 “마(魔)의 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up>50)</sup>

한편 귀환 동포 또한 전염병 유입의 매개체로서 묘사 된다.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콜레라가 “전재민을 따라 잠입”<sup>51)</sup>했다 등의 표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아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히 중국으로부터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특정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 조선 안에 발생된 환자는 모다 廣東이나 上海서 전염되어 균(菌)을 가지고 도라온터인데 그들은 一만 귀환동포와 함께 기차를 타고 행동을 가지하였고 또아즉 발견되지 안흔 환자도 각처에 잇슬것이 예상되어 금후 이 전염병은 一만동포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후략)<sup>52)</sup>

당국자의 말에 의하라면 현재 중지방면은 호열자와 장질부사 등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잇스며 중지에서 도라오는 귀국동포 중에는 이런 악균의 보균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sup>53)</sup>

중국으로부터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일반’ 귀환자와 구분되었으며 국내 이동 과정에서 ‘일반’ 귀환자에게 콜레라를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콜레라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보균 의심자라는 시선이 향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귀환에 대한 시선을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콜레라 환자가 처음 발생한 광둥으로부터의 귀환선이 부산항에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귀환선의 탑승자가 『釜山新聞』에 하선하게 해달라는 탄원문을 전달하는데 이 탄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48) 『歸還同胞船에 虎疫侵入: 今後各地로波及의 危險』, 『自由新聞』, 1946년5월23일.

49) 『虎疫防止하자, 生鮮菜蔬等 生食말자』, 『釜山新聞』, 1946년5월6일.

50) 『虎疫防止鉄壁陣치자』, 『釜山新聞』, 1946년5월7일.

51) 『虎疫! 保健에 SOS: 벌써死亡者十六名』, 『漢城日報』, 1946년5월24일.

52) 『歸還同胞船에 虎疫侵入: 今後各地로波及의 危險』, 『自由新聞』, 1946년5월23일.

53) 『釜山港에 虎列刺! 中支同胞歸還船中에서患者發生』, 『中央新聞』, 1946년5월7일.

우리들은 故國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더러운 病菌으로서 寶貴로운 故國을 더럽힐 生覺이야  
있지 있겠습니까. 차라리 三千이 고스런히 全滅하는 恨이 있다치드라도 그럼 陸上 適當한 場所  
에 隔離收容하여 주시는 것이 [후략]<sup>54)</sup>

이 탄원문에서도 귀환선의 콜레라는 “더러운 病菌”으로 “故國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철저한 격리를 통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인 디아스포라 스스로의 절박한 ‘다짐’은 당시 콜레라 유입의 원인이라 여겨진 귀환, 귀환선, 그리고 귀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해방공간 부산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 V.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해방공간 부산에서 귀환 그리고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해방공간 부산은 귀환의 ‘창구’로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래 없을 규모와 속도로 귀환자가 유입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문제는 부산 지역사회의 귀환, 귀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귀환자 유입으로 인해 만성화된 실업문제는 주택 부족 및 빈곤문제, 노점상 및 아동 행상 양산, 치안 불안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환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에서 비롯된 귀환과 귀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동정과 뒤섞인 양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콜레라라는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이 귀환선, 귀환자를 통해 진행되면서 이러한 양가적인 인식은 균형을 잃고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귀환선과 귀환자는 콜레라라는 공포와 ‘더러움’의 대상의 매개체로 인식되었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귀환, 귀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했다.

기존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연구를 통해서도 해방과 동시에 진행된 이들의 귀환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에 있어서 민족적, 국가적 과제로 여겨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인식은 결코 동일하게 공유된 것은 아니었다. 개인 또는 집단별로 각각의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귀환과 귀환자에 대한 인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지역에 주목하여 이러한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은 기존의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연구, 나아가 디아스포라연구 전반이 담론 또는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져 와 추상적, 거시적인 측면에만 주목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연구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두겠다. 본 연구는 주로 신문기사를 검토함으로써 해방공간 부산에서의 귀환 그리고 귀환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다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이외에도 세대, 젠더, 계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귀환 및 귀환자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작업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54) 『三千名·死의恐怖: 海上에서陸地同胞에嘆願』, 『釜山新聞』, 1946년5월5일.

## 참고문헌

- 「救援하자 歸還同胞, 音樂과 演劇의 밤」, 『嶺南日報』, 1945년11월30일.
- 「歸鄉路資를義捐: 釜山署員이歸還同胞에」, 『釜山新聞』, 1946년6월12일.
- 「歸還同胞船에虎疫侵入: 今後各地로波及의危險」, 『自由新聞』, 1946년5월23일.
- 「歸還同胞失業對策: 農家配置土木工事に動員」, 『釜山新聞』, 1946년5월19일.
- 「極貧歸還同胞, 濟州島에約百戶移住」, 『釜山新聞』, 1947년11월15일.
- 「同胞들 故國歸還爲해 不急旅行은 自肅하자」, 『民衆日報』, 1945년10월12일.
- 「百萬名 突破 記念式: 釜山埠頭 歸還同胞收容所서 盛大」, 『中央新聞』, 1946년1월14일.
- 「府民四分一이失業者」, 『釜山新聞』, 1946년8월14일.
- 「釜山府內의要救護者15萬」, 『民主衆報』, 1947년12월24일.
- 「釜山港에虎列刺! 中支同胞歸還船中에서患者發生」, 『中央新聞』, 1946년5월7일.
- 「三千名·死의恐怖: 海上에서陸地同胞에嘆願」, 『釜山新聞』, 1946년5월5일.
- 「失業者都市釜山: 十二萬無職者中歸還同胞半以上」, 『釜山新聞』, 1946년5월30일.
- 「哀愁어린港都의古今: 歸還同胞密輸等으로混淆한釜山」, 『漢城日報』, 1946년7월9일.
- 「運動界消息, 歸還同胞救濟拳鬪盛況」, 『民衆日報』, 1945년11월21일.
- 「戰災農民二萬余: 前日人土地를耕作」, 『釜山新聞』, 1946년6월27일.
- 「戰災同胞를 救恤하자」, 『東亞日報』, 1945년12월13일.
- 「港都의求職者增加一路: 釜山職業紹介所에서 본 社會相」, 『釜山新聞』, 1947년7월3일.
- 「虎疫防止鉄壁陣치자」, 『釜山新聞』, 1946년5월7일.
- 「虎疫防止하자, 生鮮菜蔬等 生食말자」, 『釜山新聞』, 1946년5월6일.
- 「虎疫!保健에SOS: 벌써死亡者十六名」, 『漢城日報』, 1946년5월24일.
- 「虎疫全道에猖獗: 可恐! 死亡率五〇%」, 『釜山新聞』, 1946년6월12일.
- 공윤경(2010), 「부산 산동네의 도시경관과 장소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13(2), 한국도시지리학회, pp.129-145.
- 김만석(2011), 「콜레라, 난민 그리고 항구: 해방 이후 부산의 지정학적 풍경」, 『해양평론』2011, 한국항해항만학회, pp.148-171.
- 김인덕(2003), 「해방 후 조련과 재일조선인의 귀환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2-54.
- 배미애(2007), 「부산시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13(5), 한국지역지리학회, pp.477-494.
- 여성구(2004), 「1940년대 전남지역 한인의 강제연행과 귀환: 구술을 통해 본 귀환생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22, 호남사학회, pp.1-34.
- 이상봉(2010),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研究: 在日코리아인을 보는 새로운 視覺」, 『한일민족문제연구』18, 한일민족문제학회, pp.107-146.
- 이현주(2004),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戰災同胞 구호활동: <<대중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29, 한국근현대사학회, pp.35-59.
- 장석홍(2003),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학회, pp.9-26.
- \_\_\_\_\_ (2004), 「해방 직후 상해지역의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28, 한국근현대사학회, pp.254-282.

- 정혜경(2003), 『일제 말기 조선인 군노무자의 실태 및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pp.3-92.
- 조용욱(2005),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직전 미국 측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33, 한국근현대사학회, pp.247-282.
- 채영국(2003),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학회, pp.83-103.
- 최영호(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 활동』, 글모인.
- \_\_\_\_\_(1995),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 그 과정과 통제 구조』, 『한일관계사연구』4, 한일관계사학회, pp.99-135.
- \_\_\_\_\_(2003),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5-49.
- \_\_\_\_\_(2011), 『韓人 歸還者の 눈에 비친 解放直後 釜山의 이미지』, 『韓日民族問題研究』20, 한일민족문제학회, pp.101-127.
- 황병주(2000), 『미군정기 전재민 구호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35, 한국역사연구회, pp.76-113.
- 황선익(2005), 『해방 후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34, 한국근현대사학회, pp.201~220.
- \_\_\_\_\_(2013), 『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재일한인 귀환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64, 한국근현대사학회, pp.150-190.
- \_\_\_\_\_(2013), 『동북아정세와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1944~19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4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285~326.
- \_\_\_\_\_(2018), 『해방 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85, 한국근현대사학회, pp.117-149.
- 蘭信三(2019), 『引揚・追放・残留の国際比較・関係史にむけて』,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編, 『引揚・追放・残留—戦後国際民族移動の比較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pp.1-16.
- 厚生省勤労局長・厚生省健民局長・内務省管理局長(1945), 『朝鮮人集團移入勞務者等ノ緊急措置ニ関スル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 『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 鈴木久美(2017), 『在日朝鮮人の「帰国」政策—1945~1946年』, 緑陰書房.
- 鉄道総局業務局長(1945), 『関釜並ニ博釜航路經由旅客輸送ノ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 Levitt, Peggy. and Rafael de la Dehesa (2003),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Redefinition of the State: Variations and Expla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26(4), Routledge, pp.587-611.
- Skrentny John D. et al.(2007), “Defining Nation in Asia and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of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4), Sage Publications, pp.793-825.

【 논문초록 】

|   |  |
|---|--|
| 키워드<br>(Key words)  | 해방공간, 부산, 한인 디아스포라, 귀환, 사회문제<br>Post-Liberation Period, Busan, Korean Diaspora, Repatriation, Social Problems  |
| <p style="text-align: center;"><b>Repatriation of Korean Diaspora and Busa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b></p> <p style="text-align: right;">Choi Minkyung</p> <p>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versity of perceptions about repatr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local community by examining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Korean diaspora's repatriation and the impact of their repatriation on Busa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p> <p>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unique perception on repatriation and repatriates was formed in Busan, a gateway of repatriation. Since August 1945, more than 2 million Korean diaspora had repatriated to Busan from Japan, mainland China, and Taiwan in a short period of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community of Busan, this meant a large influx of population, and various social problems derived from this movement had an effect on the gaze on repatriation and repatriates. Representative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influx of repatriates were housing shortages, unemployment and infectious disease. In local community of Busan, as confronting and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a ambivalent awareness of the repatriated Korean diaspora was created. Regarding the shortage of housing and unemployment, sympathy turned to the repatriates, although repatriation brought social confusion. However, in the face of the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negative perceptions, in particular anxiety and fear, became more intense, and interestingly, it was prominent toward repatriates from a specific region.</p> <p>Like this when analyzed at the local level, the repatriation of the Korean diaspora was not a legitimate issue as a national task, and gazes on it showed complex aspects due to various social factors.</p> |  |
| 필자<br>인적사항  | 성명(한글): 최민경           (한자): 崔璿耿           (영문): Choi Minkyung<br>국문제목: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방공간 부산<br>영문제목: Repatriation of Korean Diaspora and Busa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br>소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br>E-mail: minminchoi@pknu.ac.kr |
| 논문작성<br>일시  | 투고일 : 2020. 11. 09.   심사일 : 2020. 11. 25.   심사완료일 : 2020. 12. 09.  |